공기 촉박 · 재원 부족… 수해 복구 공사 제대로 되고 있나

- 강원도, 항구적 개량 복구 위해서는 체계적 수순 밟아야 -

지난 여름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강원 · 영동 지역에서는 복구 공사 설계 용역이 속속 마무리되어 공사도 서서히 발주되고 있다. 앞으로 2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해 복구 공사 규모는 3조 4,000 억원대. 지난해 강원도 내 전체 공사 발주 물량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수해 복구 공사 발주를 앞두고 공사 발주 방식 등을 놓고 강원도 전체가 떠들썩하다.

부실 · 채산성 악화 우려

수해가 난 기초자치단체들이 ‘ 수해 직전인 8월 31 일 이전 시 · 군 관내에 소재한 업체 ’에 수해 복구 공사 계약 우선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자 비수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해 복구 공사를 따기 위해 수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해 이전까지만 해도 719 개에 불과하던 강원도 내 일반건설업체 수가 11 월 중순 현재 900 개를 넘는 등 업체 난립 양상이 심각하다. 강원도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 업체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해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 있다.

예기치 못한 특수로 기술자는 물론 단순 노무직 인건비도 상승하고, 건자재 가격과 중장비 임차료마저 올라 업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부실 공사와 개별 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감사원과 행자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에서도 수해 복구 공사를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비리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복구 예산 3조 4,500 억원 규모

태풍 라마순과 8월 호우, 태풍 루사로 강

원도는 공공 시설과 사유 시설을 합쳐 모두 2조 7,920억 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주택 1,731채가 전파되는 등 모두 3만 1,738채의 주택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피해 9,465 ha, 도로·교량·하천 등 공공 시설 9,352건이 붕괴 또는 유실되었다.

이로 인해 3조 4,523억 8,900만원대의 복구 예산이 편성되어 향후 2, 3년간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해 정도가 극심한 강릉, 양양, 고성, 정선 등 9개 시·군에서 자체 발주할 공사 물량만도 1조 7,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강릉시는 자체 발주 물량이 4,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성군과 양양군이 각각 2,800억원, 삼척시 2,500억원, 정선군 2,000억원 등이다.

내년 봄부터 본격화 가능할 듯

11월 중순 현재 강원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이 50 % 가량 완료되었다. 이 중 하천은 54 %, 농어촌 도로는 43 %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설계 용역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것들도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난 소규모 공사들이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고 중·대형 공사들도 설계가 끝나는대로 속속 발주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원 영동 지역은 해풍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지만 적설량이 많아 본격적인 복구 공사는 내년 봄부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가 마련한 설계·시공 기준

강원도는 향후 닥칠 해일, 풍·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항구 복구 차원에서 '강원도 자연형·산각 계곡형' 개량 복구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도로·교량·농경지 등의 복구 설계 용역도 가급적 수계별로 일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설계업체를 묶어 주관 설계업체를 정해 발주했다. 하천 폭이나 도로 선형 등 아웃 라인을 정하는 기본 설계 용역은 참가한 용역업체가 분담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교량은 홍수 때 임목이 걸리지 않도록 교각 수를 줄이고 교각 간 폭을 넓히는 장경간 구조로, 암거를 설치하는 대신 가능한 교량으로, 도로 횡단 배수관은 흄관 대신 암거로 개량 설계하라는 세부적인 사항도 눈길을 끈다.

공사 완공 시점은 장기 계속 공사가 아닌 공사는 가급적 내년 우기 이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다. 주택 등 소규모 민생 관련 공공 시설은 동절기 전에 조기 완공하고 영농 관련 수리 시설이나 농경지는 내년 4월 말, 중·대형 시설은 가급적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항구·개량 복구는 '회의적'

그러나 설계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 수해 지역 공무원, 지역 주민 등 상당수가 엄청난 복구 물량에 비해 촉박한 완공 기한과 부족한 재원 때문에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항구 복구 설계에 회의적이다. 이를테면 수해로 붕괴된 10 m의 제방을 항구 복구 차원에서 15 m 높이로 높게 설계하려고 해도 시간과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방고가 올라간 만큼 주변 도로나 주택 등 각종 시설물의 높이도 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릉시 등 수해 시·군 공무원들도 개량 복구 차원에서 농경지를 하천에 편입하려 해도 재원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양군은 남대천 하천 폭을 넓힐 예정이나 하천에 새로 편입될 지주들의 반발로 설계 변경 등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항구 복구, 개량 복구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체계적인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계 용역 업체와 수해 시·군 공무원들은 또 장기 계속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 모두 마치라는 것도 항구 복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수해 시·군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수십 군데의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체계적인 감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제한 경쟁 입찰… 갈등 표면화

수해 시·군은 대부분 수해 직전인 8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에 공사 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양, 태백, 정선, 삼척 등 4개 시·군에서는 10억 20억원 이상 공사를, 속초시는 30억원 이상, 강릉시는 40억원 이상의 공사를 강원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입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는 수해 시·군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배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 내 수해 지역과 비수해 지역 업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수해 시·군과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은 과거 수해 복구 공사 발주 관행이나 침체된 지역 경기 부양 등을 내세워 시·군 관내 업체 위주의 공사 발주 방침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강원도 내 입찰 대상인 20억 40억원대의 단일 공사가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느냐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하겠다'는 강원도와 지자체의 다짐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CJ

고달순
강원일보 경제부 차장